

장성 상무대 관련 18명...기아차 광주공장서 첫 확진

코로나 대규모 확산에 방역수칙 강화 마스크 과태료 대상 실내시설로 확대

광주-전남에서 골프모임, 장성 상무대 관련 확진자 등이 연일 발생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달 1일부터 한층 강화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유지하되 시설별 방역 수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남대 병원과 광주교도소, 호프집, 유흥주점, 중학교, 성당, 골프모임 등 일상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5일간 광주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은 시민만 1만3091명으로, 시민 전체의 1%에 가깝다. 자가격리자도 현재 2302명에 달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2주간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으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인원 제한을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또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타벅스커피업 등 음식점

취가 금지되고,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격렬한 집단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 시 좌석수를 30%로 제한하고, 스크린 경마장은 운영이 자체를 중단한다. 공공시설 입장인원도 정원의 30%로 제한한다.

이 밖에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실내시설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격상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지역사회 3명, 해외입국 1명 등 4명(광주 684-687번)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역사회 감염자 3명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676번 접촉자다.

특히 이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

섰다. 방역당국은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직인 A씨(광주 686번)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해 공장 직원 70명을 검사하고 격리조치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내부 방역을 모두 마쳤다.

전남에서도 이날 장성 상무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모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총 누적 확진자도 422명으로 늘었다. 전남 421번 확진자는 상무대 첫 확진자인 전남 395번 접촉자로, 상무대에서 발생한 18번째 확진자다. 이 확진자는 27일 밀접접촉자 3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고 재검사한 후 29일 양성 판정됐다.

지난 28일 확진된 16명은 국군대전통합병원으로 격리 입원 조치됐다. 전남 395번과 관련해 군인-민

간인 접촉자 등 총 875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17명이 양성 판정받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선제적 감염차단을 위해 상무대 군인 가족 등 5000명 전체를 전수 검사하는 방안과 신규 교육생 사전검사 의무화를 방역당국과 논의했으며, 진단검사비용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이번 상무대 집단 발생 원인으로 사전 코로나19 검사 없이 신규 교육입교생과 유증상자를 교육에 참석시킨 점을 지적하고, 육군본부에 신규교육생 사전진단검사 의무화 및 국군합병병원 내에 음압격리 10병상을 마련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드라이브 인 ACC' 차 안에서 뮤지컬 관람해요 28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 뮤지컬 공연 실황 영상을 시민들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관람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28~29일 이틀 동안 '드라이브 인 ACC' 행사를 진행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 총리, 코로나 백신 3천만명분+ α 로드맵 발표 공급물량 대폭 상향...與, 4400만명분 확보 방안 검토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물량으로 당초 목표치인 3000만 명분에 더해 추가 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러 이번 주 백신 확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000만명분을 확보한다.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필요한 양의 백신을 제 때 확보해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에 관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며 "지난번 국무회의에 보고된 목표량은 3000만명분"이라고 했다.

이어 "3000만명분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이 관련된 공급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세계백신공급기

구)를 통해 1000만명분을 필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다만 "이 백신은 어떤 계약을 했을 때 이 것이 100% 공급된다고 하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며 "경우에 따라서 (임상) 3상을 잘 하고 있다"고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구매하는 상대자를 1-2곳으로 정하지 않고 위험을 분산하는 노력도 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약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물량을 최대 4400만 명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데 대해서는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빠르면 금주 중에 보고할 형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정부의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부동산 불법거래, 봉선·수완서 화정·학동·침단까지 확대

외지인 매수자·중개업자 집중 단속...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대상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연말까지 광전동, 침단지구 등 외수인 매수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이는 외지인 투자자가 봉선동, 수완지구 뿐만 아니라 화정동, 침단2지구 등 광주 전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지역의 외지인 매수자와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실거

래가 거짓신고, 무등록의 중개행위, 공인중개업소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매물 등록 등이다.

학동 아이파크 아파트는 평균 평당 가격이 지난 7월부터 월별로 2336만원, 2389만원, 2335만원을 기록하다가 지난달에는 2532만원으로 올랐다.

광전동 재개발구역 아파트는 7월 2309만원에서 9월 2733만원으로, 침단 2지구 아파트들은 7월 1348만원에서 9월 1564만원으로 급등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남구, 광산구와 합동단

속반을 편성해 봉선동과 수완지구 중개업소 44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위반내용으로는 매매계약서 미보관 1건, 신고내용과 계약서 불일치 6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12건 등 총 24건이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국토부 장관에 지역 현안 지원 건의 경전선 전철화 신속 추진 등 7건...김현미 장관 "최대한 지원하겠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SOC와 신성장 산업 분야 현안 7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내 반드시 필요한 국도·철도·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가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 적용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 국가계획에 서둘러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가 이 외에 건의한 지역현안은 ▲경전선 전철화 일부구간(보성-순천) 신속 추진 ▲천사대교 날개달기 기본계획비 반영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조성 ▲K-UAM 그랜드 헬리콥터 지정 ▲유·무인

기 통합 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등이다.

특히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향후 5년에서 10년간 국가 도로망과 철도망, 항공망 등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김 지사의 분석이다.

김 지사는 ▲고흥-완도 등 국도승격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광주-완도 2단계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추포-비금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등 전남 핵심기반시설의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공 고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대의원 선출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의원 임기**
2021. 1. 1. ~ 2024. 12. 31.(4년간)
- 2. 대의원 선출인원 : 25명**
- 3. 후보자 등록**
광산구, 서구, 남구, 함평군, 관내에서 담배를 판매 중인 회원
- 4. 서류제출기간**
2020. 12. 1. ~ 2020. 12. 18 (금)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전 회원
- 6. 피선거권**
정관 제22조 제1항 호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 7. 문의처 : (062)955-2615**

2020년 11월 30일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서광주조합
선거관리위원장 홍 훈 기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철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용도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상가기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아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라브층, 수리사용가 신아래 마을 뒷 야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회소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동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 전화 062)464-9706